
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19. 2. 24



국민권익위원회



목 차

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

II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
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 4

1. 2019년 역점 추진과제 4

- ①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 창출
- ②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권익 최우선 보호
- ③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구현

2. 신규 발굴 과제 20

- ① 생활적폐 청산으로 청렴한 공정사회 실현
- ② 부패수준의 과학적 진단·분석을 통한 국가청렴도 관리

IV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4

【별첨】 국정과제 추진현황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

1. 범국가 부패방지시스템 마련과 부패현안 대응으로 국가청렴도 제고

- ✓ 부패인식지수 : ('17) 54점 / 51위 → ('18) 57점 / 45위 (3점, 6단계 상승)
- ✓ 부패인식도 조사 : “우리사회가 부패하다”는 인식
(‘17) 66.8% → (‘18) 53.4% (13.4%p 개선)
- ✓ 공공기관 청렴도 : ('17) 7.94점 → ('18) 8.12점 (0.18점 상승)

□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체계를 구축

-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범정부 반부패 협력을 제도화
※ 협의회(4.18., 11.20. 개최)를 통해 관계기관과 채용비리, 생활적폐 등을 개선 추진
- 공공·경제·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
※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등 3건의 개선안 제안
-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인 「5개년 반부패종합계획」을 마련
※ 4대 전략 50개 반부패 과제로 구성

□ 부패현안에 신속히 대응하여 부패재발을 차단

- 공직사회 내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
※ 해외출장 부당지원 유발법령 정비, 해외출장 지원 투명화 등
- 기회 균등을 훼손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
※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 비리연루자 엄중 제재, 매년 전수조사 정례화, 특별 채용 재량규정 일괄정비 등 투명성 강화,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등
-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‘갑질’ 금지 등 공직자 행위기준을 강화
※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에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,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고 갑질 행위를 규정

☞ 부패·부조리·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

2. 신고자 보호 강화로 사회의 자정작용 촉진

- ✓ 공익신고 접수 : ('17) 2,521건 → ('18) 3,923건 (1,402건 증가)
※ 처리건수: ('17) 2,238건 → ('18) 3,952건 (1,714건 증가)
- ✓ 부패신고 보상 : ('17) 113건 / 21억 → ('18) 166건, 31억 (역대 최대규모)
- ✓ 신고자 보호인용률 : ('17) 52.4% → ('18) 58.6% (6.2%p 개선)

□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

○ 부패신고자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강화

※ 준수대상을 '누구든지'로 확대하고, 비밀공개 시 징계요구 근거를 신설

○ 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 등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

※ 불이익조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,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

□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·보상

○ 부패신고 보상 시행 이후 최다건수, 최대규모 보상금 지급(166건, 31억) 하고,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사건을 처리

※ (처리건수) 37건('17년) → 90건('18년) / (보호인용률) 52.4%('17년) → 58.6%('18년)

☞ 공익신고 활성화로 민간부패 개선 및 자율적 예방노력 촉진

3. 국민권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

✓ 고충민원 처리 : 접수 30,712건, 처리 29,609건, 인용 2,413건

✓ 제도개선 : 반부패(25건)·권익구제(17건)·생활밀착(73건)

□ 약자와 현장 중심의 고충 해소

○ 이동신문고, 기업고충현장회의로 중소기업, 취약계층의 고충 해소

※ (이동신문고) 도서·벽지, 취약계층을 84회 찾아가 2,163건 상담, 1,032건 해결 (기업고충현장회의) 경제위기지역 등을 16회 찾아가 287건 접수, 93건 해결

○ 국선대리인제 등 신설 행정심판제도 시행으로 권익구제 기반 확대

※ 경제적 약자의 심판청구 지원을 위한 국선대리인제를 도입하고, 원만한 갈등해결 지원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시행

□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

○ 부정·부패, 국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

※ 지방의회 예산집행 정기감사, 일용직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등

○ 국민이 주도하는 소통·참여플랫폼 운영

※ 국민생각함은 '16년 개통 이후 회원 12배, 안건 12배, 참여 9배로 성장 (지진경보문자 알림음 차별화, 채용 시 임금정보 공개 의무화 등 정책 반영)

☞ 적극행정으로 국민고충을 해소하고, 개별민원 처리와 민원유발 부패·제도의 개선을 연계하는 종합적 처방 추진

II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업무추진 여건

- (정치환경) 부패·불공정·부조리 관행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커지고,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 고조
- (경제환경) 고성장 시대가 끝남에 따라 소득 불평등, 일자리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'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'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
 - ※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(GDP)은 전세계 11위이나, '더 나은 삶 지수'(Better Life Index)는 38개국 중 29위에 불과(OECD, 2017)
- (사회환경)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국민고충 빈발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초래되는 사회갈등이 신뢰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*의 축적을 저해
 - * 사회적 자본: 사람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규범, 신뢰, 네트워크
 - ※ 정부신뢰는 36%로 OECD 평균 45%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(갤럽, 2018)

2. 업무추진 방향

-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 성과 창출
 - 특권, 반칙 등 국민의 삶 속에서 부조리를 야기하는 생활적폐를 청산하고, 신고 활성화·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전개
-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권의 최우선 보호
 -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, 경제위기지역, 소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', '따뜻한' 권익보호를 추진
-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구현
 -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행정발전의 동력으로 승화하기 위해, 민원 정보 개방을 확대하고, 국민의 정책참여를 일상화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

2019년 역점 추진과제

①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 창출

1 개요

- 사회 전반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,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민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

※ '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(권익위) : 일반국민 53.4%가 '우리 사회가 부패하다'고 응답('17년의 경우 66.8%)

- 그간 다양한 영역 곳곳에 누적되어 온 불공정·부조리와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

⇒ 공공·민간을 포괄하는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, 청렴행정·청렴경영이 뿌리 내리게 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반부패 성과 도출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(1)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·보상

-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

- (이행력 확보) 불이익조치자, 보호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 조치, 징계요구 및 이행강제금·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강화

※ 징계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기관 언론 공표 또는 국무회의 보고 방안 검토

- (보호 다양화)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등 지원방안*을 마련하고, 합의·조정 등 대안적 해결방안 적극 모색

* 청렴교육 강사 기회 제공, 계속 근무시 승진가점 등 신고자 우대 조치, 중장기적으로 전직·재취업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

- (사후관리) 보호조치 결정 이후 보호조치 이행, 추가 피해·불이익 발생 여부 등에 대한 **사후 점검·관리를 강화**
 - ※ 점검 결과 추가 불이익조치 발견 시 즉시 보호사건으로 접수·처리

□ **신고사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신고자 보상 확대**

- (선제적 관리) 부패수익 환수예정 사건 등 **보상금 지급가능 사건 현황, 법률관계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사전 추적 관리**
 - ※ 보상금 지급가능 사건과 보상금 신청사건을 비교하여 보상금 신청이 누락된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 실시(반기별)
- (구조금 활성화) 신고자가 받은 피해의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**적극적인 구조금제도 운영***
 - * (예시) 적극적 해석을 통해 이사비용에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포함
 - ※ 소송 관련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비용,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 검토·추진

(2) **청탁금지법·행동강령 등 반부패 규범의 이행력 제고**

□ 「청탁금지법」의 규범력 강화

- (법 사각지대 해소) 합법을 가장한 부정청탁·금품수수 등 **취약분야***를 포착하여 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**청탁금지법 관련 조례·사규 등 정비**
 - * (인사청탁) 신규채용, 정규직 전환시 청탁, (후원·협찬) 민간에 대한 후원·협찬 강요 및 모집·집행·정산의 체계적 관리 부재, (시상·포상) 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한 우회적 금품제공 등
 - ※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에 포함된 ‘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’를 법률로 상향 입법 추진
- (법 집행 책임성 제고) 각급 기관의 신고 처리 **현황 실태조사(반기별)**, 부적절 처리 기관에 대한 **현지점검 확대**로 엄정한 법 집행 독려
 - ※ 양벌규정 미적용, 과태료 미부과 등 부실제재 기관명 및 부정청탁 내용·조치결과의 공개를 유도하는 등 각급기관의 책임성 강화
- (법 준수 분위기 조성) 법 적용 대상별·기관 특성별 **맞춤형 교육·홍보를 확대**하여 자율적 법 준수 노력 촉진
 - ※ 국민과 함께하는 「청탁금지법」 권역별 설명회 개최(반기별), 현장에서 수집된 질의·응답 및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Q&A 자료집 발간·배포 등

□ 새로운 행동강령 행위기준 정착 및 사각지대 정비

- (제·개정 지원)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(훈령) 제·개정안 적정성 심사 등 지원을 통해 새로운 행위기준의 자체 반영 유도
 - ※ (「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 내용) 공공부문 갑질 근절,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, 이해충돌방지,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
 - ※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(가칭)」 제정 추진
- (징계양정기준 강화) 부정청탁·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대한 공직유관단체의 징계양정기준을 강화(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)
 - ※ (부정청탁) 비위 정도, 고의·과실 여부에 따라 ‘최소 견책’에서 ‘최대 파면’까지 징계하도록 기준 설정 / (금품수수)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포상·상훈 전력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

□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

- (관리 사각지대 제거)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범죄경력 자료, 소득 자료 조회 등 비위면직자 취업제한대상 확인 강화
 - ※ 공무원연금·군인연금 급여 제한자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(경찰청) 및 ‘기타 소득’ 자료(국세청) 공유 추진
- 비위면직자, 취업제한 사기업체 업무관련성, 생계형 취업자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, 사례를 구체화한 ‘운영매뉴얼’ 마련·배포
- (심사방식 개선) 비위면직자의 취업 가능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에서 사전허가 방식*으로 운영체계 전환 검토
 - * ‘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심의위원회(가칭)’를 설치하여 공정한 사전심사 실시

(3)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

□ 청렴수준의 주기적 평가·개선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촉진

- (목적·대상) 규모·영향력이 큰 산업분야*를 중심으로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경쟁력 저해요인의 자율개선 노력 견인
 - *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10개 분야(제조, 건설, 도·소매, 운수, 금융·보험, 전문서비스, 교육서비스, 방송·통신미디어, 문화·예술·스포츠, 보건·의료·사회복지)

- (모형·측정) 산업부문 특성에 맞게 청렴수준·부패 취약분야·부패 방지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측정하는 모형 설계 및 실측(8월)

※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, 국제평가기관(WEF, IMD, TI 등)의 설문, 공공기관 청렴도 지표, 범죄통계 등을 참고(국책연구기관 등과 협업)

□ 투명한 청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

- (긴밀한 협력체계 구축) 부패요인, 부패방지시스템 효율성에 대한 컨설팅, 청렴경영* 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 주요 경제·직능단체와의 협력 강화

* 그간 ‘윤리경영(Ethical Management)’에 부패 없는 청렴한 경영을 포함시켜 논의하였으나, 이를 ‘청렴경영(Business Integrity)’으로 특화

※ 청렴·윤리경영 강사 Pool을 보강하고, ‘CEO 및 임원진 청렴경영 교육 과정’을 신설해 효과성 제고

- (우수사례 공유·확산) ‘청렴경영 우수사례 공모전’, 공기업 청렴 사회협의회*를 통해 발굴된 우수 정책·사례를 민간기업과 공유

* 전력공사, 철도공사, 건강보험공단, 도로공사 등 35개 공기업 참여('18.11.15.)

□ 공·사 영역 접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패유발요인을 상시 개선

- (사전 예방) 공공기관 계약·조달, 보조금 분야 등의 법령·조례·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민간부패 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

※ 불공정·불투명 등 민간부패와 재정누수·낭비 등을 유발하는 공공기관 사규 개선 등

- (사후 개선) 갑질, 민관유착, 불법의료행위 등 고질적인 민간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 추진

※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또는 기관별 추진과제로 권고 등 관계기관과 협업

□ 민간분야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 강화

- (신고 활성화) 빈발 민간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신고 기간*을 운영하고, 신고자에 대한 보호·보상 안내 강화

* (예시) 산업자원(R&D)·고용노동·농축산식품 분야(3~6월), 인허가·입찰·폐기물 처리 등 관련 지역토착비리(6~7월), 허위·부실 시험·검사·인증 등 안전분야(10~11월)

- 신고 유형·추세 등을 분석하여 정밀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제도개선으로 연계

- (신고대상 확대) 사회적 영향이 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대상에 포함*하기 위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 추진('18.11.22., 정무위 상정)

* 금융산업구조개선법(타인 명의를 이용한 재산은닉·자금세탁), 대리점법(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특정 상품·용역 구입 강요)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조합임원 선출 관련 금품수수 행위) 등

(4)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

□ 청렴한 사회 만들기 범국민 프로젝트 전개

- ('나부터 실천하는 청렴韓 세상' 운동) 공공기관이 원칙대로 공정·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1기관 1청렴행정·청렴경영 실천운동* 전개

* 공공기관별 청렴행정·청렴경영 실천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·이행·홍보

- 청렴활동 노력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과제선정·실천을 촉진하고,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공부문 및 일반국민에게 확산*

※ '반부패 청렴·공정 박람회' 개최(하반기) 등을 통해 실천운동의 성과를 적극 홍보

- (청렴사회협약 확산·이행) 지역별·직능별*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, 추진과제와 이행방안 도출 및 자율적 실천 유도·지원

* √ (지역) 17개 광역시·도별 지자체, 공공기관, 경제·직능단체, 시민단체 등
 √ (직능) 민관협의회 참여단체인 변호사협회, 감사협회, 공인회계사회, 사회복지협의회, 청소년단체협의회, 시민사회단체 등
 √ (경제) 대한상의, 경영자총협회, 여성경제인협회, 시민사회단체 등
 √ (문화·예술·체육)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, 대한체육회 등

□ 청렴에 대한 인식이 행동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

- (공직자 등) '적극적 청렴'을 주제로 청렴배심원, 청렴토론 배틀 등 교육콘텐츠와 게임요소를 접목한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·운영
- (일반 국민) 아동-초·중·고 학생-대학생·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*의 활용을 강화하여 청렴은 즐겁고 편리한 것이라는 인식 형성

* (아동) 인형극 등 제작·보급, (초·중·고 학생)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, 고3학생 대상 '청렴아 놀자' 청렴캠프 운영, (대학생·성인) 공개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청렴강의 수강 확대, 공모전 등을 통한 재미있는 청렴이야기 확산 등

(5) 반부패 혁신 성공을 위한 반부패정책 총괄기관으로 조직 재설계

□ 추진 배경

- 조직·정책 전반의 혁신을 통한 고질적·구조적 부패문제 청산과 이를 위한 반부패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산

⇒ 권익위 조직을 반부패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 공고화

【반부패·권익행정 혁신추진단 주요 건의사항】

- ◆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, 권익위 기능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 실시('17.10.13.~12.13.)
- ◆ (위원회 기능 재조정) 부패방지 기능 중심으로 고충처리 기능은 연계 강화, 행정심판 기능 분리 등
- ◆ (반부패 기능 보강) 국정과제 수행과 반부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능 보강과 개편 *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, 실질적인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

□ 추진 현황

- (주요내용) 부패예방과 음부즈만 간 연계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* 등의 측면에서 부패방지과 고충처리 기능은 현행과 같이 통합 수행

* 부패개념이 권한남용·금품수수 등 소극적 개념에서 부실·소극행정, 무사안일, 불공정·불합리한 행정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

- 법령해석·행정심판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,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변경

- (법 개정)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, 「행정심판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 ('18.1.31.), 정무위 상정('18.7.24.) 및 법안2소위 계류 중

□ 향후 계획

- 여·야 대상 개정 법률안의 취지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설명하는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설득 노력 경주

2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권의 최우선 보호

1 개요

- 경기약화, 고용위축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적 약자·영세 기업·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
- 특히, 법적 근거 없는 인허가 지연, 포지티브 방식(원칙 금지, 예외적 허용)의 민원처리 등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국민 불편·불만 해소 시급
- ⇒ 고충처리·제도개선·행정심판 등 권익위의 기능과 역량을 결집,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국민권의 보호 및 포용국가 실현 뒷받침

2 주요내용

(1) 국민의 편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적극행정 실현

- 고충민원 빈발분야 개선을 통한 민원 발생의 원천 차단
- (민원분석) 고충민원 접수·처리 유형을 분석*한 결과 국방, 주택, 도로·도시 분야 등에서 동일·유사한 유형의 민원이 빈발
- * '2018년 고충민원 처리실태평가 연구용역'을 통해 26,623건의 고충민원 분석
- (제도개선) 제도정비로 민원발생의 근원적 해소가 가능한 세부 업무유형을 분야별로 선정, 기획·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추진

< 고충민원 빈발유형(예시) >

| | |
|-------|---|
| 국방 |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문제로 인한 복무기관 재지정 민원 급증 ('17년 243건 → '18년 388건) |
| 주택 | 임대주택 일부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'세대분리 14일 이내 전출신고'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민원 지속 ('18년 임대주택 민원 232건) |
| 도로·도시 |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에 대해 수용자와 피수용자간 보상비 산정이 충돌하는 민원 지속(최근 3년간 잔여지 보상 민원 273건) |

□ **갑질 유발 지침 등을 개선하여 국민중심의 공공사업으로 전환 유도**

- (발굴)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,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업자 편의 중심의 규정·지침·사규 등 적극 발굴
- (개선) 부당한 개별 행정작용에 대한 시정권고에 그치지 않고 근거가 되는 지침 등의 개선까지 적극 요구

< 갑질 유발 지침 유형(예시) >

| | |
|----------|--|
| 불공정 관행 | 군부대가 우월적 지위에서 모호한 계약내용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부대 내에 입점한 업체에 피해 발생 |
| 사규 일률 적용 | 주택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민원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내부규정만을 적용한 공매로 민원인의 진입로 이용 애로 발생 |
| 위임 일탈 | 도로관리청에서 ‘공익사업으로 점용허가를 취소할 때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철거·원상회복’ 할 것을 점용허가조건으로 제시 |

□ **집단민원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행정불신의 확산 차단**

- (발굴)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거나, 장기간 표류하는 집단민원* 발굴

* '17.10월~'18.9월까지 129개 지자체에 100인 이상 집단민원 1,021건 접수 (2018년 고충민원 처리실태평가 연구용역 결과)

- (처리) 권익위에 민원이 신청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없으므로 각급기관에서 권익위에 집단민원 중재를 신청하도록 유도

- 현장조정, 시정권고, 기획조사 등으로 집단민원 적극 처리

※ (조정사례) 새만금방조제 축조 후 17년간 여객선 운행 중단으로 소형어선을 이용해 육지를 왕래하던 비안도(182세대, 350여명 거주)에 대해 군산해양경찰서 등 6개 기관과 협의, 비안도-가력선착장 간 도선운항 추진('18.12월)

- (제도 보완) 각급기관의 신청에 의한 집단민원 해결의 법적 근거* 마련

* 집단민원 정의와 대상·범위, 행정기관의 조정 신청권, 조정인 임명·위촉과 업무, 조정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집단민원조정법」 제정 추진

□ **지방옴부즈만 활성화로 더 촘촘한 권익구제망 구축**

- (제도 정비)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에 반하는 조례*의 개정 권고, 「민원처리법 시행령」에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 지방옴부즈만 명시**

- * (부패방지권익위법) 임기 4년, 사무기구 의무 설치, 위원 위촉시 의회 동의
→ (법 위반 조례) 2년 연임, 사무기구 임의 설치, 의회 동의 없는 위원 위촉
- ** 「민원처리법 시행령」 개정안 제17조 ⑧ 민원인은 시·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언제든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.(상반기 신설)

○ (설치 확대) 미설치 지자체 대상 방문 설명회*, 고충민원 평가의 '지방옴부즈만 활성화' 지표의 배점 확대** 추진

- * 지방옴부즈만을 설치하지 않은 11개 광역지자체 우선 대상
- ** ('18년) 광역 20점, 기초 10점 → ('19년) 광역 25점, 기초 15점

○ (역량 강화) 지방옴부즈만 운영이 미흡하거나 신규로 옴부즈만을 설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컨설팅, 역량교육* 등 지원 확대

- * 전체 37개 지방옴부즈만의 50% 수준인 20개 대상 컨설팅 실시 및 반기별 집합교육 실시, 지방옴부즈만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등

(2)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 쇄신을 위한 입체적 처방

□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

- (면책 확대) 법령에 근거한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 감사에 따른 책임이 감경·면제됨을 명확화
 - ※ 감사원 면책기준을 적극 적용하도록 기관별 감사규정 개정·정비 유도
- (사례집 발간·활용) 시정권고 등을 수용·이행하여 국민의 고충을 해소한 적극행정 사례집 제작·배포
 - ※ 사례별 시사점을 도출하여 각급기관에서 '적극행정 가이드라인'으로 활용
- (교육·점검) 수용 및 불수용 사례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공직자의 인식 전환 교육 및 점검에 활용
 - ※ 관계부처 적극행정 권역별 합동 설명회(3~4월 예정), 국조실·행안부·감사원 등의 소극행정 점검 시 활용

□ 소극행정에 대한 감시·관리체계 강화

- (범정부 '소극행정 신고센터' 설치) 국민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·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(3월)
 - ※ 신고사항은 갑질 신고에 준하여 소관기관의 감사·감찰 부서 등에서 조사·처리

- (시정권고 사후관리) 권고 수용률이 낮은 기관*을 대상으로 '고충 민원 전략회의'를 개최, 불수용 원인 진단·분석 및 대안 모색
 - * 서울시(69.6%), 농어촌공사(64.0%), 근로복지공단(75.9%) 등('08~'18년 누적 평균 수용률 90.8%)
- (행정심판 간접강제 활성화) 행정심판 인용결정시 청구인에게 간접강제제도*를 적극 홍보·안내
 - * 행정청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령(「행정심판법」 제50조의2)

(3) 일자리 창출 및 서민고충 해소를 위한 권익구제 활동 강화

□ 적극적인 현장소통으로 경제활동에 활력소 제공

- (중소기업·소상공인) 중소기업·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테마별·지역별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 해소
 - ※ 청년·장애인·주한외국기업 등 테마별 현장회의(6회), 고용·산업 위기 지속 지역 현장회의(6회) 개최
- (서민·격오지주민) 5일장, 다중이용시설* 등을 대상으로 민생 이동신문고 집중 운영**
 - * 전통·재래시장, 시골장터 등 연 12회, 역사·터미널·운동경기장·지역축제 등 연 12회 이동신문고 운영
 - ** 유사 대민 이동서비스 제공기관(전용 버스 보유)과 협업으로 생활서비스 및 종합적 민원상담 제공
- (사회·경제적약자) 외국인 근로자, 다문화가정, 현역장병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*
 - * 외국인력지원센터, 군부대 등을 방문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연 37회 개최

□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과도한 압류·출국금지 등 관행 개선

- (압류 후속절차 지연) 과태료·세금 체납 등에 따른 압류재산을 장기간 (10년 이상) 방치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
 - ⇒ 압류 후 후속절차 속행, 압류 관련 재량권 제한 등 추진

- (체납자 출국 규제) 세금 체납을 이유로 고액체납자의 출국을 일괄 규제함으로써 생계 목적 출국까지 차단되는 불합리 초래
 ⇨ 여행가이드, 수출업체 운영자 등에 대한 과도한 출국규제 해소
- (체납통지 미흡)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이 1회만 통지됨으로써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연금 가입기간 축소 등의 피해 발생
 ⇨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체납사실을 안내하도록 통지체계 개선

□ 취약계층·지역의 행정심판 접근성·활용도 제고

- (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) 다수 이해관계인이 얽힌 복잡·난해한 사건 등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수의 국선대리인 선임 적극 검토
 -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한 조정회의 및 위원회 출석·조정 등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서민의 공공분쟁 도우미 역할 수행
- (순회행정심판 확대)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지역, 청구사건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심판 횟수·대상 등을 확대하여 운영
 - ※ (횟수) '18년 6회 → '19년 8회 / (대상) 기존 운전면허 사건 중심에서 일반사건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

(4) 국민권의 증진을 위한 정책·제도개선

□ 민생안정 4대 중점분야 제도개선에 역량 집중

- (일자리) 취업 불편, 인·허가 및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중·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유발 요인 등을 적극 개선하여 일자리 정책 지원

- ◆ 고용·산업위기지역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전직 요건 개선
- ◆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차별,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

- (생활안전) 시설물, 교통, 소방, 식품 등 국민 안전 위해요소 발굴·개선

- ◆ 주유소 휴·폐업 시 토양오염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
- ◆ 건강·안전 관련 행정처분 결과 공개방식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

- (주거·복지) 주거 및 경제 취약계층, 한부모 가정,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

- ◆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명확화
- ◆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신분증 발급 대상 확대 및 정보접근성 기술표준 정비

- (보건·의료) 요양시설, 병·의원 관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

- ◆ 노인학대 모니터링, 요양근무사 처우개선 등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의 질 제고
- ◆ 외부에서 약품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 설치·운영 개선

□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상시적으로 추진

- ('국민의 소리' 분석) 매년 증가추세인 국민신문고, 국민콜110 등에 제기된 민원 중 빈발·급증 사례를 분석, 국민 시각에서 개선과제 발굴

- ※ 국민신문고 민원 : ('16) 230만건 → ('17) 310만건 → ('18) 475만건
- 국민콜110 상담 : ('16) 267만건 → ('17) 293만건 → ('18) 325만건

- (생활불편 유발요인 제거) 행정서비스 이용에 지속적 불편을 초래하는 모호한 기준, 복잡한 절차 등을 집중 개선

- ※ '18년 주요 권고사례 : 중소기업 퇴직자의 소득세 감면 직접 신청제도 신설(기재부),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대상에 유산 가정 자녀 명시(복지부) 등

□ 대국민 소통 및 홍보 강화로 제도개선의 체감도 제고

- (의견수렴) 국민들의 생생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국민생각함(온라인 참여 플랫폼) 및 현장회의·토론회* 등을 통해 폭 넓게 수렴

- * 시민참여 원탁토론회('18.6월),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('18.11월) 등 국민 참여형 현장 의견 청취 확대

- (홍보)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, 파급효과가 큰 우수 이행사례에 대한 온·오프라인 홍보 강화

3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구현

1 개요

-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, 참여욕구 증대, SNS 대중화로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년 증가
 -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전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직접적 참여 요구도 확산
- ⇒ 급증하는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 요구를 정책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

2 주요내용

(1)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·청렴 거버넌스 안착

-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부패방지·청렴정책 선도
 - (의제) 국민의 상실감과 대외 이미지 저하를 야기하는 구조적 부패요인을 찾아 개선방향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논의
 - ※ 부패요인의 부정확한 진단과 기존정책 답습 등 근본적 해결이 지연된 분야, 국민 눈높이 변화로 새롭게 부각된 이슈 등 논의(민관유착, 보조금, 갑질관행 등)
 - (운영) 부처별 대책이 현실성 있게 수립되고, 실질적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대안 답습에서 탈피하여 근본적 혁신방안을 마련
 - ※ 기존 공공기관 감사관회의와 병행하여 자치단체장 협의회, 교육감 협의회 등 지역 현장과의 소통·협업을 강화하여 반부패정책 확산 촉진
-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반부패·청렴 파트너십 강화
 - (정책제안) 국민의 시각에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공론화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

- ※ 협의회 및 참여단체(30여개)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, 생활적폐·채용비리·토착비리 등 반부패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논의 및 의제화
- ※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(부산, 전남 등 6개 지역 출범)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반부패·청렴 정책과제 발굴·논의

- (의견표명) 사회적 영향이 큰 주요 부패현안·사건에 대해 협의회의 의견을 신속히 발표하여 국민적 관심 환기

□ 반부패·청렴 정책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 통로 다양화

- (온라인) 국민생각함과 SNS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정·부패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
 - ※ 국민생각함에 ‘반부패·청렴정책’ 국민참여 창구(’18.6월 개설), ‘국민권의 TV(유튜브)’ 운영(상반기) 등을 통해 반부패 정책성과 홍보 및 국민소통·참여 활성화
- (오프라인) ‘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’이 주요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생활 속 부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즉각 환류
 - ※ 모니터링 결과의 숙의를 위한 원탁토론회 및 설문 실시

(2) 민원 빅데이터 분석 강화 및 실시간 개방 확대

□ 적시성 있는 민원분석으로 정책개선 지원

- (중점분야 분석) 취약·소외 계층과 관련이 높은 사회서비스·복지 분야에서 국민불편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확대
 - ※ (취약·소외계층)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 가정, 북한 이탈주민 등 (사회서비스) 보건의료, 교육, 고용, 주거, 문화, 환경, 복지 등
- (민원예보 개선) 특정 시기에 빈발하거나 새롭게 급증한 민원에 대한 자동 알림기능을 도입하여 ‘민원예보’의 정확성·적시성 제고
 - ※ (정기에보) 해당 시기의 과거 3년간 키워드 분석 → ‘빈발민원’ 정보 추출 (수시에보) 급증 키워드 분석 → ‘최신 민원 이슈’ 포착

□ ‘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’(bigdata.epeople.go.kr) 서비스 제공

- (민원 빅데이터 실시간 공개)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유형으로 시각화하여 국민에게 제공(’19.1월~)
 - ※ 최근 10년간 총 45종 2,875만여건의 민원데이터를 공개·공유

< 주요 제공 정보 >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통계정보 | 주요 민원 통계(일·월·연도별, 지역별, 기관별, 성별·연령별) |
| 분석정보 | 상위 및 급증 민원키워드, 분야별 현황, 맞춤형 통계 등 |
| 분석리포트 | 국민의 소리 주·월간동향, 이슈분석 보고서 |

- (이용 활성화) 산·학·연에서 개방된 민원정보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, 정책 연구, 제도개선 등에 적극 가공·활용하도록 유도*

* 연구기관, 전문가, 언론, 기업 등 민원정보에 대한 관심이 큰 사용자에 대해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

□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공개를 통한 동일·유사 민원 감축

- (유사·관심 민원 제공) 민원인과 처리기관에서 공개에 동의한 민원 답변 원문을 국민신문고와 ‘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’를 통해 공개
 - ※ 고발·신고 등 제보성 민원,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이 곤란한 민원 등은 비공개
- (단계적 공개 확대) 현재 자체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공개하고 있는 80개 기관부터 시범적으로 공개(19.1월말~) 후 전체기관으로 확산

(3) 소통·참여·정책설계 플랫폼 고도화로 국민의 정책참여 실질화

□ 온라인 참여플랫폼(국민생각함)을 통한 국민관심 사안 정책화

- (정책참여 확대) ‘국민생각함과 민간 포털 공동 설문’ 확대(반기 → 분기), ‘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’ 정례화(분기별)
 - ※ 사회적 이슈 발생 시 민간부문과 수시 협업하고, 청소년·대학생(신규) 대상 공모전 개최, 대학과 연계 등 1020세대 특화 참여 프로그램 확대
- (정책반영도 제고)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·행정 서비스 개선한 성과를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(행안부 협업)
 - ※ '19년 정부혁신평가 국민생각함 관련 지표 : 국민생각함 등 국민참여 제도를 활용하여 정책을 개선한 성과(사례)

□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으로 국민이 편리한 소통·참여 실현

- (참여포털 일원화) 국민신문고, 민원분석, 국민생각함으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*해 ‘민원분석·정책이슈 발굴 → 공론화 → 제도개선’의 선순환 구조 완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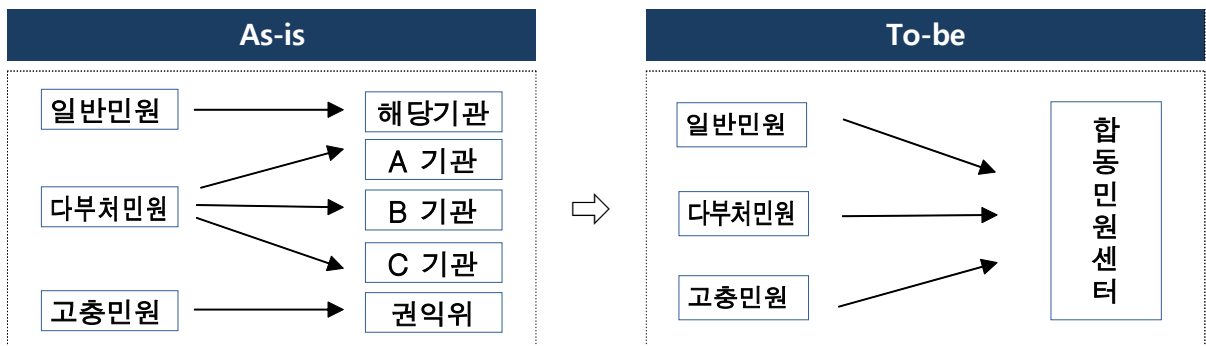
* 시스템 분석·설계(~'19.3월) →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('19.3~11월) →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통('20.1월)

- (국민신문고 이용편의 제고) 민원·국민제안 신청 프로세스 간소화, PC·모바일 등 접속 기기별 최적화면 제공으로 사용자 불편 해소
- (민원분석 기능 고도화) 기계학습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도입해 주요 정책·갈등 이슈를 신속·정확하게 포착하여 선제적 대응 지원
- (국민생각함 개선) 사용자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관심 안전 자동 제공, 토론결과 자동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국민참여 활성화
 - ※ (예시) 30대 기혼 여성의 이용패턴 분석 → 미세먼지, 워킹맘 관련 국민생각함 안전 및 민원·제안 사례 자동제공 → 참여 안전별 정책반영 현황 통보

□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·운영으로 민원상담서비스 혁신('19.7월)

- (종합민원상담 제공) 고충민원·일반민원·복합민원·다수부처 관련 민원을 센터 한 곳에서 종합 상담하여 민원인의 시간·비용 감축
 - ※ 부처 파견 공무원, 권익위 조사관, 민간전문가(변호사 등)의 전문적·종합적 상담
- (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)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원조정협의체를 운영, 업무경계나 처리방향이 모호한 민원의 해결 방향을 협의·조정

<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전후 비교 >



1 생활적폐 청산으로 청렴한 공정사회 실현

1 개요

-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‘권력형 적폐’ 청산이 상당 부분 진척되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으나, 국민 일상에서 적폐청산의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
 - 채용비리, 갑질, 학사비리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반칙과 특권, 불공정·부조리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증대
- ⇒ 권력형 적폐 청산을 넘어 국민생활 곳곳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부패*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 추진
 - * 유치원·학사 비리, 공공기관 채용비리, 공공분야 갑질, 보조금 부정수급, 지역 토착비리, 탈세 행위, 요양병원 비리, 재건축·재개발 비리, 안전분야 부패 등

2 주요내용

- 생활적폐에 대한 범정부 신속 대응체계 구축·운영
 - (과제 발굴)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부패현안을 중심으로 신규과제*를 발굴하여 신속한 해결 모색
 - * (예시) 대표 선발과정 공정성 논란 및 부실한 협회운영 등 체육계 도덕적 해이,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 부패(대리 수술, 의약품·의료기기 리베이트 등) 등
 - (협업·소통을 통한 이행관리) 과제별 소관부처가 참여하는 ‘생활적폐 대책 협의회*’를 통해 주기적 이행점검 및 개선성과 적극 홍보
 - * 의장(권익위 부방부위원장) 및 과제 소관기관 국장급 참여
-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여 일자리 공정성 제고
 - (세밀한 관리체계 구축) 매년 공공기관의 직전년도 채용 전반에 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*하고,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점검 추진
 - * 1차 감독부처, 2차 채용비리근절추진단 및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 실시

- 채용비리 취약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 부처와 함께 채용 제도·운영 전반에 관해 종합 특별조사* 등 집중 관리

* 연루자 엄중제재, 피해자 구제 등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

- (채용제도 혁신) 채용단계별 취약요인 등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, 현장에 착근되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

* 기재부, 행안부, 고용부 등 관계기관 협업 및 공조 활성화

□ 카르텔형 지방 토착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처

- (입체적 접근·처방) 부정청탁, 이해충돌, 갑질 등 부패의 유착고리와 부적절한 관행을 특별 점검하고,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요소 제거

-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통해 지자체별 고질적·만성적 부패취약요소를 진단·발굴하여 자발적 개선 독려

< 토착비리 관련 개선과제(예시) >

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청탁금지 | ■ 과도한 후원·협찬 요구 등 |
| 행동강령 | ■ 민간기업에 지인 채용청탁,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 |
| 취약요인 개선 | ■ 지역체육회 지원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|

- (협업을 통한 효과성 제고) 지자체 단체장 협의회(시도지사 협의회·시군구청장협의회),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(부산, 전남 등 6개 지역 출범) 등과 과제 발굴,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등 협력 확대

□ 고착화된 공공분야 갑질관행을 근원적으로 개혁

- (윤리기준 정립·확산)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에 반영('18.12월)된 '갑질' 개념 및 금지규정 등 강화된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 및 전파

※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을 개정해 기관별 소속 공직자 대상 행동강령 교육시 갑질 예방 교육도 포함하도록 의무화('19.1.8.)

- (상담채널 확대) 갑질 피해자 전용 '익명 상담 채팅시스템('18년 구축)을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상담 서비스 접근성·편의성 제고

- (신고자 보호)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사건에 준하는 비밀보장·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2차 피해 예방

2 부패수준의 과학적 진단·분석을 통한 국가청렴도 관리

1 개요

- 기존 '청렴도 평가'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국가 전체의 청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부패인식지수(CPI)를 주로 활용
 - 부패인식지수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여 실제 부패수준과 괴리가 있고, 부패원인을 진단하지 않아 청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곤란
- ⇒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종합적 청렴수준 진단시스템을 마련하고, 이에 근거해서 청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렴선진국으로 도약
 - ※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G20, OECD, IACC(International Anti-Corruption Conference)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와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부패측정지수 개발 논의 주도 및 국제사회 전파·확산 추진

2 주요내용

- 국가의 부패수준을 통합적으로 진단하는 '국가청렴지수(가칭)' 개발
 - (평가체계 개발)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하고,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종합한 진단·평가 모형을 개발

< 국가청렴지수 모형(안) >

| 분야 | 주관적 지표 | 객관적 지표 | 조사대상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공분야 · 행정·입법·사법부 · 공직유관단체 | (인식) · 현 부패수준 · 부패방지 노력도 | · 적발처벌 통계 · 언론보도 등 | · 민원인(공공분야) · 외부거래자(민간분야) · 내부구성원 · 일반국민 · 전문가 |
| 민간분야 · 산업부문 · 산업 외 부문 | (경험) · 직접경험 · 간접경험 | | |

- (단계별 구축·적용) 우선 모형 개발에 주력하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개선 후 반부패정책 수립·추진에 반영하여 신뢰성 제고
 - ※ 지수 개발·시험측정('19년) → 국가청렴수준 진단·평가('20년~) → 국가 청렴데이터 축적 및 반부패 정책 반영('21년~)

□ CPI를 보완하는 부패측정지수 발굴·활용

- (공공청렴지수) 부패수준의 객관적인 평가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청렴지수(IPI; Index of Public Integrity)를 CPI와 병행 활용
 - 사법부 독립성, 행정적 재량 등 6개 지표에 관한 구체적 데이터와 질문지 분석을 통해 부패 기회 및 통제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 측정

【 공공청렴지수(IPI) 개요 】

- ◆ EU 지원으로 ‘유럽 반부패·국가역량 연구센터(ERCAS)’가 주관(격년 평가)
- ◆ 사법부 독립성, 행정적 재량, 교역 개방성, 예산 투명성,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부 감독 정도 및 언론의 자유 정도 등 6개 지표 측정
- ◆ CPI: 57점 / 100점, 45위 / 180개국('18년) vs IPI : 8.09점 / 10점, 23위 / 109개국('17년)

- (신뢰성 높은 부패측정지표 지속 발굴) UN 지속가능개발목표(SDG)의 뇌물경험 지표*와 같이 부패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발굴·활용

* 지난 12개월간 공무원과 1회 이상 접촉한 개인 및 기업인 중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, 뇌물 요청을 받은 사람의 비율

□ 반부패 노력이 청렴도 상승으로 귀결되도록 평가체계 개편

- (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간 연계) 청렴도 하위 기관은 시책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, 상위 기관은 평가를 면제해 청렴도 상승 유인 제공

※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이고 부패사건 미발생 기관은 평가 제외, '18년 청렴도 4, 5등급 기관 중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을 평가대상에 추가

-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취약업무로 진단된 분야에 대해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 설계·구성

- (내·외부 청렴도 편차가 큰 기관에 대한 지원·관리) 내·외부 청렴도 측정 항목 중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과 대책 제시로 개선 노력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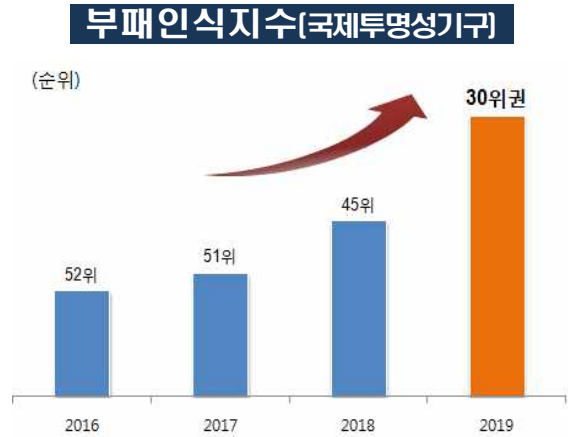
※ 특정분야에서 내·외부 청렴도 간 괴리가 지속될 경우 청렴도 설문변경, 내·외부 청렴도 반영비율 조정 등 측정모형 개선 추진

- (시책평가 사각지대 해소) 시책평가('19년 271개)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 상급기관이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전수

IV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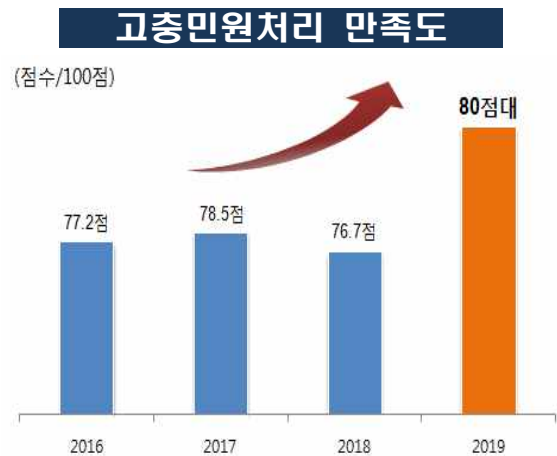
□ 청렴사회로의 진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부패와 불공정·부조리 근절
 - ※ 공공기관 채용비리, 지방 토착 비리, 공공분야 갑질관행 등 생활적폐 청산
- 산업부문별 청렴도 측정을 통한 민간의 청렴수준 향상
 - ※ 제조, 건설, 도·소매, 운수, 금융·보험 등 10개 산업분야 청렴도 측정 실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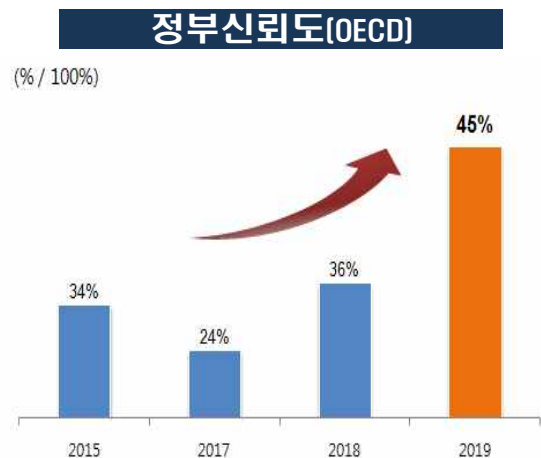
□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의 고충을 최우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.

-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
 - ※ 민원빈발 분야 기획조사, 신속한 집단 민원 해결, 지방옴부즈만 활성화, 소극적 업무행태 쇄신 등
-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
 - ※ 일자리, 생활안전, 주거·복지, 보건·의료 등 민생안정 4대 분야 제도개선 중점 추진



□ 개방·소통·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열린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.

- 민원 빅데이터의 실시간 개방
 - ※ 45종, 2,875만여건의 민원데이터 전면 공개
- 민원상담창구 혁신으로 한곳에서 종합상담민원서비스 제공
 - ※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('19.7월)
- 온라인 플랫폼(국민생각함)을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 일상화



* 2016년 조사 미실시

| 국정 과제 | 추진현황 | 향후계획 |
|---|---|---|
| <p>①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(주관 : 법무부, 협조 : 권익위·문체부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정농단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'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' 수립('18.4.18.) ○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범정부 백서 제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폐청산의 핵심적인 내용인 각 부처의 자체적인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담은 백서 제작 및 공개('18.12.31.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과제의 선정 및 부처간 이견조정을 위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운영 ※ 국정과제 조정·보완 추진중 |
| <p>②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(주관 : 권익위·법무부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한 '반부패정책협의회' 개최('18.4.18,'18.11.20) ○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이해충돌방지제도' 도입, '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' 등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를 위한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('18.4.17.) ○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범정부 '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' 출범('18.11.2.) ○ 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 도입('18.10.) ○ 국민중심 반부패·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·시민사회·학계 등 각계 대표 30인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출범('18.3.), 총 5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제안 3건 발표('18.11.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부패정책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해 부패 취약부문 개선 및 부처간 협업 강화 ○ 부정청탁·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관련 조례·사규 등 정비 ○ 채용실태 전반에 대해 정례적 전수점검(매년 1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약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○ 공익신고자 보호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징계요구 및 이행강제금·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병과 ○ 청렴 파트너십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관협의회와 반부패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반부패 현안에 대한 의제화 |